

# 동상이몽(同床異夢) 낙농제도 개혁



배 정 식  
본회 지도부장

한국낙농유업이 FTA 개방 파고를 넘지 못하고 시들어져 버린다면, 낙농가·유업체·정부 모두의 책임일 게다. 낙농가의 사분오열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건지, 유업체의 전횡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건지, 잘못 끼워진 정책의 틀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건지 책임의 앞뒤가 분명하지 않지만 말이다. 그렇더라도 만에 하나 FTA 개방 파고로 우리가 얽여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목전에 닦친 한·미 FTA 비준 공방 속에 최근 낙농제도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오면서 점점 더 그런 느낌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가고자 하는 길은 바로 저긴데 곧장 가지 못하고 에둘러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벽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설사 에둘러 가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서로 딴 꿈을 꾸며 얇은 꿈을 드려내고 있을 뿐이다. 결국 정부의 의지한계가 종착지일 가능성이 높다.

낙농제도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다들 어렵다고 한다. 지난여름 원유 가격 현실화를 위한 극한 상황이 보여주듯 말이다. 낙농산업이 FTA 개방 파고를 이겨내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낙농제도 개혁을 손꼽는다. 근본적인 낙농제

도가 이뤄지려면 훌륭한 정책입안자가 있어야 한다. 정책입안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좋은 정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정책 당국의 올바른 낙농정책목표와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이번 원유가협상에서 남유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지 예고편일 수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FTA 개방 파고가 직접 닥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낙농제도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만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어찌 보면 이런 느긋함의 원천은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이함이 자리잡고 있어서다.

이웃 일본의 축산대책 앞엔 꼭 낙농이 별도로 붙는다고 한다. 그들도 낙농대책이 그만큼 어려운 모양이다. ‘낙농제도개혁’은 동상이몽이긴 하지만 모두가 외치는 구호다. 여기서 ‘전국단위쿼터제’는 단골메뉴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올바른 제도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부는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보자는 것이다. 의미를 짚어보면 이렇다.

먼저 실현가능성의 의미다. 이는 생산자와 유업체의 합의를 전제로 한 제도를 말한다. 당연히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야말로 최선이다. 이는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그야말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다음으론 비용의 문제다. 낙농제도개혁을 위해서는 상당부분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 선부르긴 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이 또한 불투명해 보인다. 현재의 구조 속에 미완의 제도개혁이 가져올 문제는 과거의 전철을 또 고스란히 밟을 것이란 우려다.

정부의 낙농제도 개혁이 의지의 한계나 재정의 한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길 바란다. 서로 다른 꿈이 아닌, 올곧은 하나의 꿈으로 어찌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낙농제도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